

일본 사회당의 원전 정책 변화

원자력을 현실적에너지로 인정

최근 일본의 정치상황은 매우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듯 하다.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이 의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중의원이 해산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자민당 내부 분열로 신당이 출현하고 자민당이 과반수 의석획득에 실패하는 등 실로 오랜 기간 동안 일당 독주 체제를 영유해온 자민당의 앞날이 결코 순탄치만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제1야당인 사회당 역시 향후 진로 결정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 사회당은 금년 초부터 이미 정치적 변신을 시도하고 있었다. 지난 5월 작성한 당 강령 개정 초안(일명 1993 선언)에서 그동안 추구해 온 사회주의 노선을 포기하기로 하였으며 금기시 해오던 「미일안보조약」과 「한일수교조약」을 인정하는 한편 원자력발전을 현실적 에너지로서 인정하는 등 획기적인 정책 노선의 변경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세계에서 유일한 원폭피해국 세계 3위의 원전 보유국으로 발전

이중에서 특히 우리 원자력계의 관심을 끄는 내용은 원자력을 현실적 에너지원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이다. 일본은 세계에서 유일한 원폭피해국이면서도 일찌기 자원빈국으로서 에너지 자립에 있어서 원자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원전을 건설하여 현재 42기를 운전 중에 있고 12기를 건

설 중에 있는 세계 제3위의 원자력발전소 보유국이 되었다.

현재 일본의 원전은 총 발전량의 1/4 가량을 공급하고 있으며 2030년 경에 가서는 약 60%를 차지 하게 될 계획으로 점점 더 그 역할이 중요하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사회당은 이러한 현실 여건을 무시한 채 구체적인 대안 제시도 없이 탈원전만을 고집하여 왔었다.

일본 원자력선진국 발돋움하는 가운데 아시아권 활발한 사업전개 돌보여

원자력 정책 추진에 있어 가장 성공한 나라로 알려진 프랑스의 경우 원자력을 반대하던 드골이 집권 후 에너지문제 해결을 위하여는 원자력을 최선의 선택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원전정책을 추진하여 현재 원전은 전력의 73% 정도를 공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최근들어 원자력에 대한 정책전환을 시도한 예는 여러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80년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원전 2기의 조기 폐지를 결정했던 스웨덴은 원전을 대신할 만한 대체 에너지원의 실용화 및 확보의 어려움과 전기요금 상승에 따른 국제경쟁력 저하로 1991년 6월 원전 조기폐지 계획을 국회에서 공식 철회하였으며, 핀란드는 93년 2월 내각 의결을 거쳐 그 동안 유보해왔던 원자력 5호기의 건설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세계 최초로 상업용 원전을 개발하고 38기의 가스냉각로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은 개량

홍 주 보

한전 올진원자력본부장

형 가압경수로를 건설기로 결정하고 94년 준공목표로 사이즈 웰 B원전을 건설하고 있다.

세계의 각국 원자력발전에 대한 긍정적 재평가 추세로 전환

아시아권에서는 대만이 92년 2월 원자력 7, 8호기에 대한 건설 계획을 정부에서 승인하여 국제입찰 단계에 있으며, 3기를 건설 중에 있는 중국은 6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한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은 국내 경기활성화에 따른 2000년대의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 원전 도입 계획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TMI 및 체르노빌 사고 이후 침체되었던 원자력 산업은 대체에너지원 확보의 어려움과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화석 연료의 사용 규제 등으로 인해 재평가 되는 추세로써 세계 석학들의 모임인 로마 클럽에서도 종래의 유보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원자력 지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일부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의 개혁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 사회당의 경우 아직도 당내에서는 원전 반대 세력이 일부 남아 있어 집행부의 의지대로 논의가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태이지만 현실적으로 일본은 기존 경수로의 개량화와 함께 고속증식로의 개발 및 재처리 시설 등 원자연료주기시설의 추진을 통해 원자력기술 선진국으로서의 위치를 다져가고 있다. 특히 미와자키 현 구시마시상공회의소 등 지역사회에서의 원전유

치 결의와 아오모리현 등 각종 지방 선거에서 원전 추진파들이 원전을 반대하는 인사들을 누르고 당선되는 상황은 지역의 반대에 부딪쳐 국가 에너지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와는 너무 대조를 보이고 있다.

과감한 사고의 전환과 일관된 정책추진이 필요한 시기

국가의 에너지문제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서 그 나라의 자원사정 등 여러가지 형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높은 일본으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원자력발전소였으며 결과적으로 반대만을 해오던 야당에서조차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원전 부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원자력사업은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기에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 될 수 없다. 안전성에 대한 우려보다는 지역에 대한 기대이익 때문에 국가 기간산업을 반대한다면 이는 절대 현명하지 못한 처사로밖에 볼 수 없으므로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국가와 전기사업자 역시 제도적 개선 노력과 함께 국가 에너지정책을 일관되고 과감하게 추진하는 확고한 의지 표현이 필요한 시기라고 하겠다.